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핵심인물 1심서 무죄... 재판부의 판단은?

“재수사 임박, 일반출국금지 충분히 가능”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인물의 사실상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의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이를 결정했던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근)는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의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계 기소된 이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이규원 검사는 자력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는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는데, 사실상 '선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검사의 불법행위를 포착한 수사팀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실상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 모두가 사법부 판단을 비껴간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는 당시 출국금지가 이뤄진 상황적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재수사가 임박했던 김 전 차관의 경우 긴급출국금지가 아닌 일반적인 출국금지 조치 역시 충분한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 시도 당시 사건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을 비롯해 법무부, 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위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광철·차규근·이성운 등 줄줄이 무죄 이규원,서류는닉 유죄... 선고유예로 선처 “목적 정당성 충분... 필요·상당성도 인정”

검 관계자들 역시 출국 시도 전부터 사건 재수사를 예상했고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재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료 일반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존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 검사 등이 시간적인 제약 하에 긴급 출국금지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공기 이륙을 불과 1시

간30분 가장 남겨둔 상황에서 출국 시도를 파악하게 된 차규근으로서 이를 금지하거나 용인하는 등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규원 역시 시간 제약 하에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과

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근거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단정해서는 안된다. 이는 재판부 판단이다. 비록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위법성은 인정되나, 이 같은 상황을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살펴야 하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는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이였을 뿐, 피고인의 사익이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규원 차규근의 잘못은 다른 적법한 수단에 의한 출국금지가 가능했음에도 법령 해석을 그르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차 전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제기된 개인정보법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출국 규제 전 걸림자로서 출입국본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뿐 사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에 역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검사의 경우 자력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는닉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는데,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아닌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요 혐의는 모

두 벗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성운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 검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직접 또는 하급 직원을 통해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종용하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 또는 그로 인해 지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안양지청에 수사 종단을 요구하는 진술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반부패 강력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수단까지 동원해 굳이 이규원의 혐의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이규원 검사의 감찰보고 및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 외 윤대진 검찰국장의 연락,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올해 입학 초등생부터 입학지원금 받는다

장연국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입학생으로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올해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1만2,792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면 약 38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국 의원은 "2023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을 격려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이 다 소중하다"라며, "전북의 미래사신인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라면서 "앞으로 초등학교생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생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 지역의 새 교통제도 시스템 구축 입법 근거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 법안' 대표발의
주민 이동 제약 발생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 이내 교통서비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호 법안'으로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한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인 108개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3개(49.6%)가 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지하철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확충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하여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등 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 면제 등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깨끗한 선거 홍보를 위한 '돈선거 근절 홍보단' 발대식을 15일 개최했다.

도선관위, 조합장 선거 대비 돈선거 근절 홍보단 발대식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깨끗한 선거 홍보를 위한 '돈선거 근절 홍보단' 발대식을 15일 개최했다.

조합관계자 20여 명과 함께한 선관위는 구·시·군 지역조합의 하나로 마트 배송차량에 돈선거 근절 및 선거일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선거일인 오는 3월 8일까지 운행하며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선관위는 2월 초 전북우정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체국 택배차량에도 홍보물을 부착해 돈선거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내 곳곳을 누비게 될 160여 개의 차량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돈 선거 근절의 메시지'를 전달해 최근 금품으로 과열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경제위기 속 이자부담 경감 축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최용철 전주시의원 대표 발의
“서민·소상공 이자부담 완화
효과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전주시의회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5일 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은행측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의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

주시의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한 은행의 세금을 돌려 살려내듯 금리 인상에는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사 대동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권요안 도의원, 봉동생강골시장 환경개선 현장 점검·감담회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전통시장인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방문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도의원, 봉동생강골시장 이현구 상인회장, 전북도청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과 전북도청과 완주군청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봉동생강골시장은 전통이 깊은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테마 거리, 테마 축제 개최 등 지역의 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아케이드 구간과 건물 균열 등 시설물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챙기며 크고 작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해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전북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도청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우선 전신주 이설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시장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